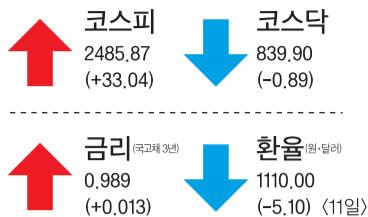




[르포]  
서울 최대 데이터센터  
KT 용산 IDC 가보니  
03



'임대차법 시행 3개월' 서울 전셋값 상승률, 매맷값의 7배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 5000억대 옵티머스 펀드 회수율 최대 15.2% 불과

옵티머스 펀드 실사 결과  
회수 가능성 C등급 83.3%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투자금 5146억원 가운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야 78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PWC)은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 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금의 63개 최종 투자처에 대한 실사를 실시해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실사결과 총 46개 펀드 설정금액 5146억원 중 실사 대상이 되는 최종 투자처는 63개, 3515억원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금액은 횡령이나 돌려막기 등으로 실사를 할 수 없었고, 현금·예금이나 타운용사 이관 펀드는 제외했다.

실사법인은 63개 투자대상의 회수가능성에 따라 등급을 ▲A등급(전액회수 가능) ▲B등급(일부회수 가능) ▲C등급(회수 의문시) 등으로 구분하고, 자산별 예상 회수율을 산출했다.

펀드 자금은 1·2차 도관체를 거치는 과정 등에서 외부자금과 섞여 최종 투자처에 3515억원 규모로 투자되거나 기존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됐다.

환매되지 않은 펀드 자금 중 3015억 원이 기존 환매된 펀드의 상환재원, 즉 펀드 돌려막기였다. 이 중 2139억원은 기존 환매된 펀드에서 도관체 등을 거쳐 투자됐지만 876억원은 지금이 어떻게 사용됐지만 불분명했다.

투자액이 확인된 3515억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1277

억원 ▲주식 1370억원 ▲채권 724억원 ▲기타 14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PF 사업은 부산 개발사업 224억원 등 진행중인 사업에 590억원, 중고차매매단지 159억원 등 미진행 사업에 687억원이 투자됐다.

주식은 S사 등 상장기업 지분 투자액 1226억원, D사 등 비상장기업 지분이 144억원이다. 기존 투자한 상장기업은 현재 대부분 상장폐지됐거나 거래정지중인 종목들이다.

채권은 H산업(234억원) 등 관계 기업 등 대여 500억원, 기타 일반기업에 대한 대여 등이 224억원이다. 기타로 콘도미니엄 수익권 등에 투자한 것이 145억원이다.

예상회수율 추정치는 전체 펀드자금 5146억원 대비 최소 7.8%에서 최대 15.2% 수준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최소 401억원에서 많아야 783억원으로 조사됐다.

실사 대상 3515억원 중 회수가 의문시되는 C등급이 292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A등급은 45억원, B등급도 543억원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기준가격 조정 등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펀드투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산실사 결과 자금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자산회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

## '일자리 예산' 밀빠진 독 물 봇기? 취업 42만명 ↓, 실업 100만명대

###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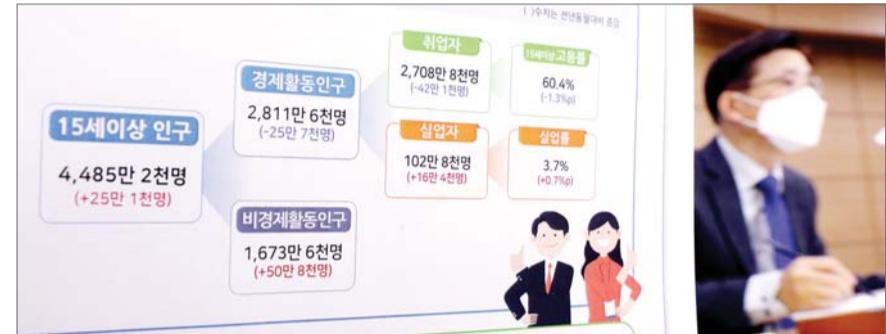
8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  
노인 일자리만 반짝 증가  
실업률 3.7%, 20년來 최대

단기성 노인 일자리 사업  
장기 국가경제 악영향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한파가 몰아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2.1만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3월 이후 8개월째 고용 축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재정 일자리를 쏟아붓고 있지만, 일부 업종 노인 일자리만 반짝 증가하는 등 통계적 긍정 요인으로만 반영될 뿐 장기적인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 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8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2만 1000명 줄었다. 취업자 수 감소는 3월 (-19만5000명)을 시작으로 4월(-47만 6000명) 최고를 찍은 뒤, 5월(-39만 2000명), 6월(-35만2000명), 7월(-27만7000명), 8월(-27만4000명)까지 완화되다 9월(-39만2000명) 다시 반등한 데 이어 8개월 연속 이어졌다. 취업자 수 감소 기간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8월까지 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을 기록했다. 통계청 정동욱 고용동향과장은 "제조업에서 감소 폭이 확대됐다"며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영향으로 물렸다. 학원 중심인 교육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의 감소 폭도 전월보다 줄었다.

반면, 정부 일자리지원사업 등의 영향에 따라,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12만3000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0만5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만2000명) 등에서만



정동욱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

로 교육 서비스, 도·소매에서 감소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22만7000명), 도·소매업(-18만8000명), 교육서비스업(-10만3000명), 제조업(-9만8000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트레일러, 금속 가공 등에서 취업자가 현저히 줄면서 감소 폭이 전월(-6만8000명)보다 커졌다. 이는 10월 수출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선 영향으로 보인다. 10월 수출은 1년 전보다 3.6%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전년 대비 취업자 감소 폭이 9월(-22만5000명)과 비슷한 수준에

줄었다. 학원 중심인 교육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의 감소 폭도 전월보다 줄었다.

반면, 정부 일자리지원사업 등의 영향에 따라,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12만3000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0만5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만2000명) 등에서만

취업자가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만 37만5000명 증가했고, 나머지 30대(-24만명), 20대(-21만명), 40대(-19만2000명), 50대(-11만4000명) 모두 감소했다. 정부 재정 일자리가 일부 업종, 단기성 일자리에 국한된 결과로,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양대 글로벌경영학과 윤재희 교수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건강한 일자리는 내수 활성화로 인한 투자증대로 창출되어야 한다"며 "단기성 노인들 일자리 사업은 고질적인 취업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조세 부담을 증가시킬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으로도 잘못하면 대중영향주의로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했다.

실업자는 102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6만4000명 증가했다. 실업자는 9월 100만명을 기록한 뒤 두 달째 100만명대다.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해, 2000년 10월 (3.7%)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라임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 '중징계'

금감원 제재심위원회 최종 제재안  
나재철·김형진·윤경은 '직무정지'  
DLF사태 징계불복 소송 재연 예상



라임자산운용 전경

1조6697억원 규모의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직무 정지' 등 중징계 제재안이 나왔다.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금융권에 대규모 소송 전이 일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중징계안을 담은 최종 제재안을 내놨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는 사전 통보와 마찬가지로 '직무 정지'에서 '문책 경고'로, 김 대표는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임원선임 제한 5년) ▲직무 정지(4년) ▲문책 경고(3년)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제재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한다. 증선위와 금융위 절차를 거치며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각에선 올해 초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CEO 징계 불복 소송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징계안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현재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은행권에 이어 증권업계에도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증권업계는 이번 징계안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증권사의 '내부통제' 실패 시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제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박미경 기자 mikyung96@